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세금 포인트'로 제품 싸게 살 수 있다

세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적립된 세금 포인트로 납세담보제공(납세 담보 면제금액)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납세자(개인·법인)가 가진 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 법인은 제외)이 쌓인다.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세청이 2004년(법인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세금 포인트가 1점 이상(법인은 100점 이상)인 개인은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 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액은 세금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값. 예컨대, 개인 납세자가 담보로 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이라면 포인트 3점을 대신 쓸 수 있다는 소리다. 한도는 연 5억원이다.

이번 협약으로 납세담보 목적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세금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할인 쇼핑물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 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15만6천명... 지급액 9천억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작년 동월(6397억 원)보다 2585억 원(40.4%) 급증했다"며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819억 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12만 5000명)보다 31000명(24.8%) 증가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천 375만 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25만 3000명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조세지원' 무더기로 쏟아냈지만... "아직 부족"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세정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 지난 8월 정부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항공·운송 및 관광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요국은 항공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우 금융지원 뿐 아니라 소비세 면제 등 다각적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